

제234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 결 안 건 ( 234차 -01 )

# '23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주요정책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2024. 3. 15.

 국 무 조 정 실



# 목 차

I. 점검 개요 .....	1
II. 점검 결과 .....	3
III. 향후 계획 .....	9
[참고1]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0
[참고2] '23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개요 .....	12



# I

## 점검 개요

### □ 점검 배경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평가의 적절성 등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5조
- 실태점검 결과 △제도 개선방안 도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기관 컨설팅 등 성과관리 역량 강화 추진

### 성과관리 제도 개요

- 중앙행정기관(46개 부·처·청)은 업무성과·정책품질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관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

- **성과관리** : 기관의 임무, 중·장기 및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정평법 제2조)
- **자체평가** :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 (정평법 제14조)

###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 점검 대상 : 46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5, 차관급 21)

### □ 점검 방법

- 부처 제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확인·점검(24.2.15~3.14)
  - 일부 항목\*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별도 점검
  - \* ▲전략목표 성과분석의 충실성(8점/100점) ▲제도 운영 우수사례(5점/100점)
  - \*\* 행정연,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전 부처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병행

□ 세부 점검항목 및 지표

점검항목	점검지표	측정내용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21)	① 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 목표체계간 연계성 및 관리과제 설정의 적절성(5)</li> <li>•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5)</li> <li>• 현장 의견, 갈등관리 계획 반영(6)</li> </ul>
	② 계획수립 노력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 등 충실성(3)</li> <li>•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노력(2)</li> </ul>
정책환류의 적절성 (25)	③ 점검·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반영(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자체평가 결과 정책개선 효과(12)</li> <li>• '23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정책개선 반영성과(5)</li> <li>• '23년 자체점검 결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충실성(8)</li> </ul>
성과 제고노력 (30)	④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7)</li> <li>• 성과관리 역량강화 및 체계 확산 노력(5)</li> <li>• 전략목표 관련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의 충실성(8)</li> </ul>
	⑤ 기관 성과 달성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평가(주요정책) 결과(5)</li> </ul>
	⑥ 우수사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사례(5)</li> </ul>
자체평가의 적절성 (24)	⑦ 자체평가의 적절성 확보 노력(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확보 노력(3)</li> <li>•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확보 노력(6)</li> <li>•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확보 노력(5)</li> </ul>
	⑧ 평가결과 환류체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의 개인성과급 및 성과연봉 반영도(8)</li> <li>• 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 노력(2)</li> </ul>
정책분석 활성화 노력 (가점)	정책 분석 활성화 노력(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정책분석 과제발굴 협업 노력(2)</li> <li>• (가점) 정책분석 개선이행 충실도(2)</li> </ul>
합계	총 8개 지표	100점(+4)

총 평

- 점검 결과, 각 기관의 개선 노력 성과가 가시화하는 등 안정적 운영 중
  - 기관별 미흡·부진과제를 적극 개선·보완\*하여 정책성과 제고
    - \* '23년 평가에서 '22년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 577개 중 359개 등급 개선(62.2%)
  - 특히, △성과관리계획 수립 △자체평가 적절성 분야 평가 우수\*
    - \* ▲국정과제-관리과제 연계율 98.7% ▲전 기관이 평가계획 사전협의·결과 이의신청 허용
- 기관장의 관심도, 평가결과 환류 등 성과제고 노력이 높을수록 성과관리·자체평가 제도운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특정평가(주요정책) 우수기관이 성과관리 운영도 우수(장·차관급 각 3개)
    - \* '22년부터 자체평가 점검시 특정평가(주요정책 부문) 결과 반영(5점 척도)
- 반면, 전년 대비 평가 등급 변동기관 수가 크게 줄고\*, 우수·미흡 기관이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과개선 동력 지속 확산 필요
  - \* 평가등급 변동기관 수 : ('22) 총 28개(장관19, 차관9) → ('23) 총 18개(장관9, 차관9)
  - △과기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농진청·산림청·특허청 7개 기관은 2년 연속 우수 △여가부·방통위·국세청·새만금청·원안위는 2년 연속 미흡

우수·미흡기관 (직제순)

구분	장관급	차관급
우수 (상위 30%)	과기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권익위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조실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미흡 (하위 20%)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제도운영 우수사례 선정 기관(4) : 환경부, 중기부, 병무청, 농진청

## 1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의 적절성) 대부분 기관이 국정과제 및 부처업무계획 등 핵심과제를 충실히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 수립

\* 42개 기관이 국정과제를 부처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100% 연계 (전체 평균 98.7%)

- 성과관리 목표체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간 연계성·체계성도 우수\*, 충실한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갈등관리 계획\*\* 수립

\* 43개 기관에서 '우수' 등급 이상    \*\* 44개 기관에서 '우수' 등급 이상

\* **사례** (국토부) 국정과제 실천과제 36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100% 연계, 내실있는 현장의견 수렴 위해 '리마인드 서비스(기관장 현장방문 → 실무자 재방문)' 시행

- (계획 사전검토) 모든 기관에서 성과관리 계획수립 시 자체평가 위원회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관별 반영 편차 큼

- (성과지표 설정) 대부분 기관이 전략목표에 대해 국민체감도를 고려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는 지표 누락·미흡

- 성과지표 중 ▲도전적 목표치 설정 ▲복합 성과지표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개선

\* ▲도전적 목표치 평균 설정비율(%) : ('21) 84.1 → ('22) 78.6 → ('23) 83.1

▲복합지표 평균 설정비율(%) : ('21) 16.6 → ('22) 17.5 → ('23) 15.9

- 일부 기관이 성과지표 POOL을 구축하고 ▲지표 이력관리 ▲신규지표 발굴 등 지표 개선·보완 노력을 한 점은 매우 긍정적

\* **사례** (문체부) 성과관리 평가지원팀 운영(총괄 1팀, 6개 분과), '문체부 성과관리 성과지표 POOL' 구축·활용하여 성과지표 적절성 제고 노력

\* **사례** (통계청) 12년간(2012~2023) 성과지표, 국내외 통계지표, 성과지표 키워드 등을 통합·체계화한 성과지표 POOL을 개발·운영 중



## 2 정책환류의 적절성 등

○ (정책개선 반영) 모든 기관에서 중간점검 및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하고 있으며, 차관급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영함

\* 정책환류의 적절성 항목 평균 점수(총 25점) : ▲장관급 17.23 ▲차관급 18.75

- 정평위의 '자체평가 부진과제 관리강화 방침('22.3월)'에 따라, 일부 기관은 적극 개선·보완 및 체계적 관리로 성과 창출 사례 제시

\* 사례 (고용부) '22년 미흡과제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 전략 마련  
→ 전국순회 설명회+30인이하 사업장 운용수수료 면제 등 조치 → 가입실적 55.1%↑

\* 사례 (외교부) '22년 미흡과제 '중유럽 국가와 협력강화' 개선 추진  
→ 우리 기업 수주 지원 이행 결과,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용역 수주 성과(C→A등급)

○ (미흡·부진과제 개선) '22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부진과제(5~7등급) 577개 중 359개 과제(62.2%)가 '23년 평가에서 1등급 이상 상승

- 개선과제 중 3등급 이상 상승 과제가 119개(33.1%)에 달하는 등, 미흡·부진과제 관리강화 방침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구분	합계	'22년 대비 '23년 평가등급 상승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개선된 과제 수	359 (100%)	130 (36.2%)	110 (30.6%)	77 (21.4%)	32 (8.9%)	8 (2.2%)	2 (0.6%)

### ※ 탁월한 개선사례('22년 7등급 → '23년 1등급)

\* 사례 (환경부) 현장중심 민관 거버넌스 협업체계 구축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1월, 37개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한 기업별 1:1 전략회의(98회)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등 추진  
☞ 녹색수출 20조원 달성 (녹색플랜트 프로젝트 16개 총 15.8조, 녹색산업체 수출 4.2조)

\* 사례 (질병청)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감염병 예측모델 개발"  
▲면역·방역조치 등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확률 예측 모형 개발(3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기법 최초 도입(4월, 전국 하수처리장 64개소) ▲감염병 주간정보 보완 등 추진  
☞ 새 분석기법으로 감염병 예측시간 단축(6~8일), 임상검사 대비 비용 절감(1/20 수준)

### 3 성과 제고 노력

○ (기관장 노력) 기관장이 직접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목표 달성도 점검 등 적극 참여한 기관이 성과관리 운영 수준 우수

- 차관급 기관이 장관급보다 기관장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지표 평균 점수(총7점) : ▲장관급 4.27 ▲차관급 5.5

\* 사례 (기재부) ▲ '정부업무평가 TF(1차관 주재)' 운영 ▲매월 기초실장 주재 자체평가 추진상황 점검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2023 자체 브랜드개발' 추진 등

\* 사례 (중기부) ▲우선순위를 고려한 핵심미션제 도입(59개 핵심미션, 125개 세부과제 선정) ▲핵심미션 분야별 전담조직(상권활력회복 등) 구성·이행 ▲장·차관 점검회의 개최 등

○ (역량강화 노력)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성과관리 교육 △관리과제 컨설팅 △연구용역 실시 등 다각적 노력 경주

\* 사례 (국방부) 성과관리 교육과정 운영, 성과지표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 사례 (권익위) 자체평가위원과 관리과제를 1:1 매칭 정책 컨설팅 실시 등

○ (전략목표 성과분석) ※ 행정연에서 각 기관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분석

- 대부분 기관이 성과지표 설명·측정산식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장애요인·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

- 일부기관은 시계열 자료 미제시로 성과 개선 추이 파악이 곤란하거나, 미흡요인·개선계획이 불충분하여 보완 필요

\* 기관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는 매년 자체평가 결과에 포함해 대국민 공개 중

\* 사례 (권익위)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점검 결과

• 전략목표-성과지표간 연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의의를 상세히 기술

•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노력 ▲미흡요인 ▲개선 필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개선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

○ (기관 성과 달성도) 기관별 정책 효과성 제고 수준 점검을 위해, 특정평가(주요정책) 결과를 '기관 성과 달성도' 점수로 반영(5점 척도)

\* '23년 특정평가(주요정책 부문) 결과, ▲A등급 5점 ▲B등급 2.5점 ▲C등급 0점 부여

○ (제도 운영 우수사례) ※ 행정연에서 각 기관 제도운영 사례 중 우수사례 선정

◆ (환경부) 실질적인 성과 중심 평가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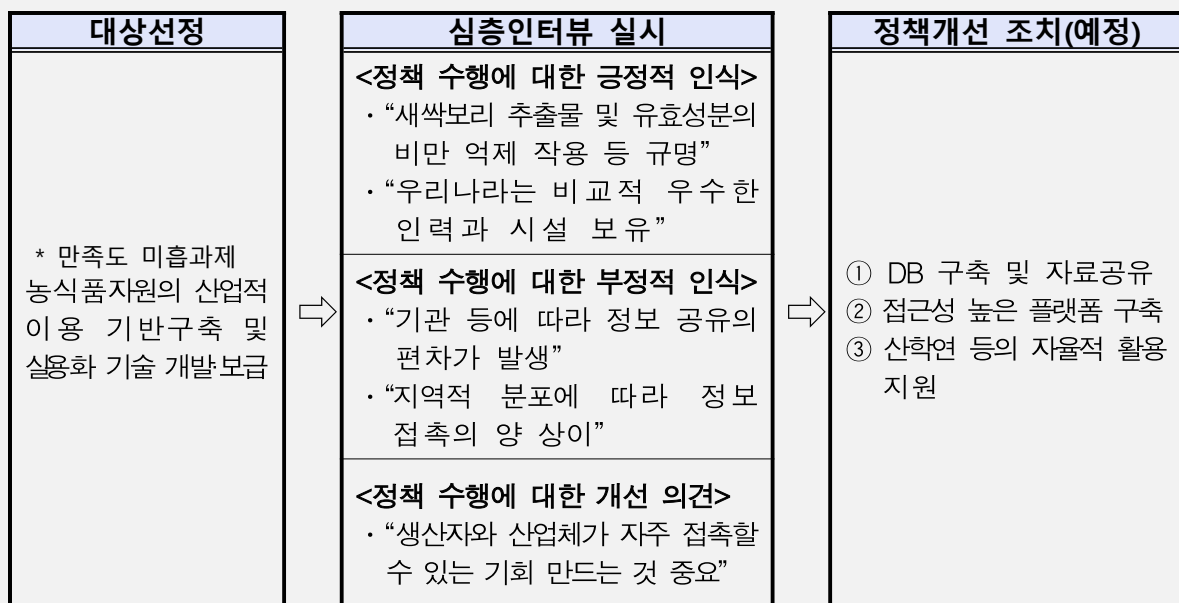
- 기관 업무 특성상 관리과제의 성과는 중·장기적 성격이 많고, 파급효과도 다양
- 가시적 성과평가 항목 배점을 늘려서 정량평가 항목을 축소하고, 대신 비계량적·부수적 효과까지 반영한 정성평가 확대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까지 추가

	22년도(기존)	23년도(변경)
평가기준	· 성과목표 달성도(30점)	· 성과목표 달성도(20점)
	· 정책효과 발생도(15점) * 정성 평가	· 정책성과 및 효과 발생도(35점) - 성과 발생도(20점) - 장기적 효과(15점)

- ☞ ① 부처별 정책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구성 노력
- ② 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이 필요한 타부처 활용 가능

◆ (농진청) 고객만족도 심층분석으로 조사 실효성 제고

- 다양한 환류제도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기관 환류 노력은 일회성·형식적 구조에 그침
- 만족도 조사 결과 미흡과제와 우수사례 대상 공·부정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 농업인/농업회사,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대상 개별 심층인터뷰
- 그 결과를 정책개선 및 소통전략 수립에 활용



- ☞ ① 다수 기관이 만족도 조사 후 그 구체적 함의를 파악하고 환류하려는 노력은 미흡 ② 농진청의 경우 미흡사례 뿐만 아니라 우수사례까지 2차 심층분석을 하고, 조사 결과에 함의를 찾으려는 노력이 탁월

#### 4 자체평가의 적절성

- (적절성 확보 노력) 모든 기관에서 △평가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 자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운영 등 적절성 확보 노력
  - (평가의 객관성·충실성) 자체평가위원 설문조사 결과, △자체평가 절차가 공정하고(95.7%) △결과가 타당하다(94.4%)고 인식
  - (평가지표 관리) 일부 기관은 정책수요자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하여 자체평가 항목에 직접 포함·운영
- \* **사례** (특허청) 관리과제별로 정책수요자와 전문가 대상 체감도 설문조사 실시(9건) 자체평가위원이 조사내용과 충실도 평가 → 자체평가 점수에 반영(10점 척도)
- \* **사례** (과기부) 성과목표별 주요 정책고객(전문가 집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5등급으로 상대평가 후 자체평가 점수에 반영(10점 척도)
- (자평위 운영) 대부분 기관에서 성과관리·자체평가 주요 절차(계획수립·평가·환류)마다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심의하는 절차적 체계 안착

##### <자체평가위원 대상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24.2.22~2.28, 행정연)>

- (위원회 역할) ▲위원회가 실질적 심의·의결 등 적극적 역할 수행(82.0% → **85.6**)  
▲부처가 평가위원의 제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86.6% → **88.2%**)  
▲위원회가 독립적·자율적으로 평가 실시(93.6% → **95.2%**)
- (위원회 지원) 기관장이 자체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83.6% → **85.9%**)
- (위원회 개선) ▲분과에 포함되는 국(局)별 전문가가 골고루 포함 필요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등

- 다만, 위원 위촉시 대학교수·연구원 등 특정직업군(60%이하 권고) 편중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구성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 (성과급 반영) 모든 기관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직급은 제외하는 기관이 있어 개선 필요
- 반영률은 권고기준(30%)을 상회하는 34.8%로 전년과 유사\*하고, 우수기관은 보통·미흡기관보다 성과급 반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체 기관 성과급 반영 평균 비율 추이(%) : ('21) 34.4 → ('22) 33.6 → ('23) 34.8

\*\* 기관별 성과연봉·성과급 반영율 현황

'23년 실태점검 등급(기관수)	전체 평균	우수(12개)	보통(26개)	미흡(8개)
성과급 반영율(%)	34.8	36.7	35.2	30.8

- (개인·부서평가 연계) 대부분 기관이 개인성과 평가(근평, BSC 등)와 연계하고, 일부는 우수 부서·개인 표창 등 인센티브까지 부여

\* 사례 (산업부) 우수과제 선정 부서 포상금, 장관표창 및 자체평가 가점 부여

\* 사례 (문체부) 자체평가 매우우수, 우수 과제 담당부서에 포상금 지급(1천만원)

### III 향후 계획

- 점검결과 기관 통보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3.26)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24년 상반기)
- 미흡기관 성과관리 실태 진단 및 컨설팅(4~5월, 행정연 협조)
- '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 수립(각 기관) 및 정평위 보고(4월중)

## 참고 1

#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
- 설문대상 : 46개 부처 자체평가위원 중 609명
- 설문기간 및 방법 : '24.2.22 ~ 28, 전자우편과 문자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내용 : ▲ '23년 자평위 운영현황 ▲ 기관장 관심도 ▲ 부처의 자체평가 운영 역량 등

- ◇ (총평)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기능하고, 평가의 공정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자체평가 체계로서 정착단계
- 전년 대비 자체평가 절차, 위원회 역할·구성·운영·의견반영, 성과관리 목표치 수준, 기관장 관심도 등에 대해 긍정적 응답 증가
  - '담당자 설명·현장점검 등 근거로 평가 실시', '부처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활용' 등 자체평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평가

## ① 자체평가와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자체평가와 관련한 실질적 심의·의결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  
\* ('19년) 81.7% → ('20년) 85.2% → ('21년) 84.9% → ('22년) 82.0% → ('23년) **85.6%**
-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부처에서 최종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수립 등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응답 역시 높은 비중 차지\*  
\* ('19년) 84.8% → ('20년) 85.2% → ('21년) 84.9% → ('22년) 86.6% → ('23년) **88.2%**
- 대다수가 자체평가 절차가 공정(95.7%), 결과가 타당했다고(94.4%) 응답

## ②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부업무평가 전문가, 부처의 소관 업무 전문가 모두 충분하고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 다수(92.1%, 전년 대비 3.9%p↑)
- 위원회 개최 횟수 성과평가를 위해 충분하다가 다수(88.3%, 전년 대비 6.2%p↑)

### ③ 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이 부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는 의견이 다수(90.5%, 전년 대비 1.0%p↓)
- 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높고, 목표치 수준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상승(3.3%p↑)\*하여 증가추세 회복  
\* ('19년) 80.5% → ('20년) 83.2% → ('21년) 85.6% → ('22년) 83.1% → **('23년) 86.4%**
- 전략목표 성과지표가 부처 업무성과 제고에 기여하며(88.2%) 부처 핵심목표를 반영하여 대표성 있게 선정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88.5%)

### ④ 기관장 관심도

- 기관장이 자체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지원했다는 의견 85.9%(전년 대비 2.3%p↑)
- 자체평가 결과를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기관장이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의견이 80.3%로 기관장 관심도 상승(전년 대비 1.1%p↑)

### ⑤ 평가업무 진행 관련

- 자체평가 진행에서 '서면자료, 과제 담당자의 설명 및 현장점검 결과를 기초로 실시했다'는 응답이 65.2%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10.6%p↑)
- '부처업무 특성 및 평가대상 과제별 특성에 맞는 자율평가지표를 개발·활용하여, 매우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응답(40.1%)이 전년 대비 7.8%p 상승
-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정량지표 위주의 지표체계(57.6%), △평가대상 과제 수 과다 등 업무부담(33.7%) 순

□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각 부처가 '23년도에 추진한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여 부처 업무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 (평가주체) 총 46개 중앙행정기관 (직제순)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25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보위, 국조실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대상) 각 부처별 '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1,838개
- (평가기간) '23.12월 ~ '23.1월 (평가결과 국조실 제출 : '24.2.5)
- (평가방법) 각 부처 업무특성에 따라 계획수립·집행·성과창출 등 정책 단계별로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  
 - 평가지표별로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고, 관리과제에 대해 상대평가
- (평가결과)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과제를 1~7 상대 등급화(매우우수 - 우수 - 다소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부진 順)
- (평가결과 활용) 조직·인사·보수 및 정책개선 등에 반영